

보도자료

배포일 : 2025.11.12.(수)

더불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 국민소통국 : ☎ 02-2630-0050 □ 담당 : 이주형 부장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 혐오, 허위조작·정보, 비방 불법 현수막 대응 관련,

"당·정부 협력 대응을 강화해 불법현수막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전국 곳곳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명예훼손 발언,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 게첩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법개정과 제보·신고 절차 강화를 중심으로 추가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정당과 단체가 특정 인물과 기관을 비방, 허위사실을 포함한 담은 현수막을 대량으로 게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짜 대통령”, “중국공산당과 선관위의 조작”, “부정선거 주범 수배” 등과 같은 문구는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이자 명예훼손성 내용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에 1차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허위·비방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행정기관의 제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법·제도적 보완과 시민 제보 활성화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는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정당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허위·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세력은 법의 공백을 악용해 이른바 ‘현수막 정당’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공공공간을 여론조작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수개월간 전국 각지에서 제기된 불법 현수막 신고를 상시 접수해 왔다.

지금까지 총 540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고, 이 중 216건을 철거했으며,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4차례의 유권해석 공문을 발송하여 제재 근거를 질의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 등의 답변으로 실질적 조치가 제한되는 현실이 반복됐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행정기관과의 협업체계 보완, 시민 제보 활성화 등 추가적인 대응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특히 1차 회의 이후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법적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특위 위원장)은 “불법 현수막은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혐오, 명예훼손이 결합된 여론조작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신고체계 정비와 법적 근거 보강을 통해, 공공공간에서의 거짓과 혐오가 사라지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